

문 18.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직장 민방위대 대원 甲이 재해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甲의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 ㄴ. 지역 민방위대 대원 乙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이나 전자문서로 송달하려면 미리 乙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ㄷ. 민방위기술지원대 대원 丙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경우, 丙은 관할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 ㄹ. 직장 민방위대 대원 丁에 대한 교육훈련 통지서는 관할 읍·면·동장이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9.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군 B면에 ㉠ 민방위사태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생기자 민방위를 위하여 ㉡ 필요한 응급조치가 취해졌다. 한편, ㉢ 민방위대의 동원 명령을 받은 지역 민방위대 대원 甲은 ㉣ 관혼상제(冠婚喪祭)를 이유로 동원을 미루고자 한다.

- ①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에 해당한다.
- ② A군의 군수가 ㉡을 명령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B면의 면장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직접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③ B면의 면장은 관할 민방위 대장에게 ㉢을 내릴 수 있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A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B면의 면장은 ㉣을 이유로 甲의 동원을 직권으로 미룰 수 있다.

문 22. 「민방위기본법」상 민방위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본 계획은 국무총리가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② 집행 계획은 중앙관서의 장이 기본 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③ 시·도계획은 시·도지사가 집행 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시·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시·군·구 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시·군·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문 23.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 편성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읍·면·동장은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되는 자에 대하여 민방위 대원의 의무가 발생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편입조치를 마쳐야 하며, 전입자·퇴직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나 직장 민방위 대장의 신고가 있는 때에 즉시 민방위대에 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가 발생한 자나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거주지의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한 직장 민방위 대장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민방위 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그 연도 1월 10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직장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하거나 해당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으면 이를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역 민방위 대원 중에서 민방위 대원의 의무가 해제되는 자는 삭제하고 새로 편입한 자는 추가한 민방위 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해당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문 24. 「민방위기본법」의 벌칙상 법정형이 동일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적법한 민방위대 동원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 ㄴ. 타인을 고용하는 사람이 고용된 사람의 민방위 대원 동원을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한 경우
- ㄷ.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구청장의 적법한 민방위 준비명령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 ㄹ.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직장 민방위대 대원을 갈음하여 직장의 장이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문 25. 민방위기본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 ① 등화관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의 빛을 내는 설비 또는 장비의 관리자,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소등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명하는 것
- ② 보상금 지급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는 것
- ③ 민방위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간을 정하여 가로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정하여 경계관제 요령에 따라 등화관제를 실시하는 것
- ④ 관내의 직장 민방위 대장을 지휘·감독하는 것